

靑, 추미애-윤석열 파장 주시... 文대통령 결단 여부 주목

靑 “대통령, 秋 발표 직전 보고 받아”

秋, 수사지휘권 힘 실어준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여론 추이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 사전 교감 여부에는 거리를 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사태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검찰 결과에 대한 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출입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과 함께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추 장관의 기자회견 50분 만에 청와대 차원의 공식 반응이다.

추 장관 발표 직전야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전 조율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총 6가지 중 4가지에 대해 JTBC 사주와의 사적 만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 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검찰 및 수사 강령 ▲인론과의 검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찰 비협조 등이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불법 사찰 정황은 이번 법무부 검찰 결과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다.

청와대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의식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법무비서관-민정수석실 라인을 통한 내부 상황 공유는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청와대가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 검찰 결과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실 사안이라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시점부터 극한 갈등 국면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한 윤 총장의 해임을 강행할 경우 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의 정무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청와대



의 고민 지점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가치분 신청을 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으로 사태가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한 것 역시 더 이상의 파열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상황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느낀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 속에 이

미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추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엄중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한 차례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상황 인식을 나타낸 만큼 사태 전개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野, 與 국정원법 개정안 저지 총력 “입법독주” “文두환 선언”

주호영 “대공수사권 폐지는 자해행위”

하태경 “대중에 친문쿠데타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25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입법독주” “문(文)두환 선언” “친문 쿠데타” 등으로 맹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가새 입법 폭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건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안 경과(警科·특기)를 가진 1600명의 경찰관을 일반 형사 사건을 취급하는 수사 특기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안보 수사국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건 대공수사를 안 한다는 말이나 간첩을 안 잡는다는 거나 다름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수사를 한군데에 모아서 ‘공통경찰’을 만드는 일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다름 아니다”라며 “일방적으

로 폐지한다면 그 권한을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남길 게 아니라 별도 독립된 기관을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이관해서 전담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간 것”이라며 “말 잘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걸로 보인다.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는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국정원 개혁 원칙을 누차 강조했다”며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

다. 여기다가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건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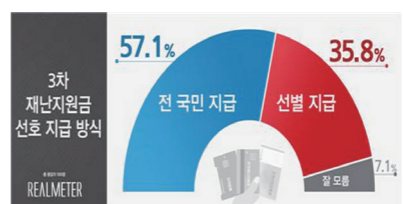
정보위원장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 폐지”라며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조직을 경찰과 국정원으로 양립된 조직을 없애고 오히려 국정원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정원 존립 목적이 국가안보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삭제해서 북한에 유리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에

찬성 56.3% vs 반대 39.7%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지급 방식은 ‘선별 지급’보다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매

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과반을 넘었으며 ‘선별 지급’ 응답은 35.8%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찬성 74.1% vs 반대 25.9%)와 인천·경기(63.1% vs 33.6%), 대구·경북(56.4% vs 40.4%)에서는 찬성 응답이 다수였고 부산·울산·경남(50.7% vs 46.0%)과 서울(43.9% vs 49.5%), 대전·세종·충청(43.0% vs 50.0%)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